

#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이호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 차 례

1. 양회(兩會) 개요
2. 경제운용 방향
3. 9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함.
  - 그 외에 이번 양회에서는 기존 양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홍콩보안법」 △민법전 등 주요 법률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
  -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2020년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과 '6대 보장'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6대 보장' 중 △고용 △민생 △시장주체(기업) 보장을 강조하였음.
  -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탈피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빈곤층 및 농민공의 고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정부가 밝힌 신규 고용, 실업률, 빈곤탈피 목표 및 재정적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재정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할 전망
- ▶ 중국정부는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코로나19 방역 ② 3대 난제 해결 ③ 내수 확대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⑤ 혁신주도형 발전 ⑥ 시장화 개혁 ⑦ 지역 균형 발전 ⑧ 대외개방 확대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9대 중점업무를 제시함.
  -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와 중점 분야에 있어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져 코로나19 방역, 3대 난제 해결(특히 빈곤탈피), 고용 및 민생 안정, 내수 확대 등이 강조되었음.
  -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공급가치사슬 안정 보장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표준 제정 등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이 제시됨.
- ▶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발 리스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중국 내 2차 유행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중 간 갈등 심화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중국과 코로나19 방역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중 통상갈등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1. 양회(兩會) 개요

### ■ 중국 공산당 제13기 3차 양회(兩會)<sup>1)</sup>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었으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2개월 반가량 연기
- 이번 양회는 코로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참석 인원과 회기가 대폭 축소되었고, 총리 및 각부처 장관의 기자회견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음.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5월 21~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5월 22~28일에 개최
-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로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 대표로 구성되어 △ 헌법 개정 △ 법률 제정 △ 지도부 선출 △ 고위 관료 임명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 △ 정부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
-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 기능을 수행

### ■ 이번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sup>2)</sup>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sup>3)</sup>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sup>4)</sup>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

-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19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치, 정책 방향, 중점 업무 등을 제시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 과제<sup>5)</sup>를 제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보완하여 2020년 9대 중점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취업 및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9대 중점 업무 중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제시
- 재정부는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에서 2019년 정부 예산 집행결과와 2020년 예산안 및 재정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

### ■ 2020년 양회에서는 △「홍콩보안법」<sup>6)</sup> △민법전 △중국판 뉴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

- [홍콩보안법] 전인대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

2) 「政府工作报告」.

3) 「关于201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0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4) 「关于2019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0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5)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 p. 5 참고.

6)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금지·차별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

- 중국정부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주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국가안보 △‘일국양제(一国两制)’ 보완 △법에 따른 통치 △외부 간섭 반대 △홍콩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보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
- 중국정부는 2019년 3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시태가 ‘일국양제’를 토대로 한 법치 기반, 정치 기반, 사회 기반 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 또한 「홍콩기본법」 제23조7)가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한바, 이번 「홍콩보안법」을 통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보안을 위한 법·제도와 집행체제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임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시행할 예정
- [민법전] 1954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입법 작업을 통해, 중국의 민사법률 규정을 총망라한 민법전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sup>8)</sup>
  - 민법전은 총칙,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권리침해·책임편, 부칙 등 총 8장, 1,260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최근 중국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내용으로는 △태아의 민사상 권리 △혼외자 권리 보호 △주거권 도입 △연 36% 이상 고금리 대출 금지 △성희롱 방지 △이혼 숙려기간 도입 △노인 부양 책임제 등이 있음.
  - 민법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담보법, 혼인법, 입양법, 상속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의 법률은 폐지됨.
- [중국판 뉴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 △국가 중점 프로젝트(两新一重)<sup>9)</sup>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
  - 신형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신형도시화 건설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 165개 국가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등을 통해 고용 및 소비 촉진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sup>10)</sup>
  - 특히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라는 투자를 견인할 뿐 아니라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신소비, 신제조, 신서비스 등 성장동력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2. 경제운용 방향

###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20년에는 '19년에 제시한 '6대 안정(六穩)' 목표 실현의 주안점으로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

7) 「홍콩기본법」은 홍콩의 자체 입법안으로, 그중 제23조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7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 귀환 이후 2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음.

8) 「新時代的人民法典」,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5/676f5b26c4954b19a874720caebbacba.shtml>(검색일: 2020. 5. 29).

9) 이번 중국 재정지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통칭하여 '양신일중(两新一重)'이라 하는데, 양신(两新: 두 개의 새로움)은 '신'형인프라와 '신'형도시화를 의미하고, 일중(一重: 한 개의 중점)은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의미함.

10) 2020년은 중국의 신형도시화 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의 마지막 해로, 계획에서는 도시 인프라 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한편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이 계획의 마지막 해임.

- '6대 안정(六穩)'은 고용안정(穩就業), 금융안정(穩金融), 무역안정(穩外貿), 외국인투자 안정(穩外資), 투자안정(穩投資), 예측가능성 제고(穩預期)를 의미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전제로 '6대 안정(六穩)'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대 보장(六保),' 즉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業),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시장주체 보장(保市場主體),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糧食能源安全), 산업·공급사슬 안정(保產業鏈供應鏈穩定) 및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層運轉)<sup>11)</sup> 과제를 추가로 제시함.
  - '6대 보장(六保)' 각 항목의 최저선을 방어함으로써 경제 펀더멘털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
- '20년 거시경제 목표에서 중국 당국은 고용안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등을 강조

■ [고용안정]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 9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및 등록실업률 목표치 각각 6%와 5.5% 제시

- [신규고용 목표] 코로나19 충격과 경제하방 압력으로 도시지역 신규고용에 대한 타격이 크지만, 신규 노동력의 취업시장 진입으로 도시 신규고용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우선정책을 추진
- [실업률 목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기간 지속되겠지만, 대규모 실업 리스크를 방지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취업안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

■ [민생안정] '20년에는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빈곤구제 해결 등 기존의 목표 임무를 완료하고, 전면적 소강(小康)사회<sup>12)</sup>를 실현하며, 각종 리스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유도

- 경제성장에 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전 세계 코로나19 형세와 세계경제 추세의 불확실성 등 중국 내 경제성장이 직면한 예기치 못한 복잡한 요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양적 목표 실현 대신 '6대 보장(六保)' 업무 수행과 경제의 질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업무 수행을 장려

■ [물가안정] CPI 상승률은 3.5% 내외 안정 목표

- '19년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CPI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짐에 따라 CPI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이지만, 시장예측을 안정시키기 위해 3.5% 내외로 설정

11) '기층조직'이란 통상적으로 중국 사회를 이루는 최저 단위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층조직의 안정'은 중국 시, 현, 향진, 촌 등의 정부예산 확보를 보장하여 교육, 의료, 치안, 전기, 수도, 공공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人民網』(2020. 4. 25), 「人民網評：保基層運轉就是保社會穩定有序」, <http://sd.people.com.cn/n2/2020/0425/c362710-33975248.html>(검색일: 2020. 5. 30).

12) '소강(小康)사회'란 모든 국민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잘사는 사회를 의미함. 2002년 장쩌민 국가주석이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그 경제적 목표는 2020년의 GDP 규모 및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제고시키겠다는 것임.

■ [주민수입 증가] 경제와 주민수입의 동반성장 추진

-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실현과 국민의 생활수요 충족을 함께 강조
- 농촌진흥 전략의 본격적 추진 등 주민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조치 실시

■ [국제수지 균형] 수출입의 안정적·질적 발전과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 유지

- '20년 대외무역 발전에 어려움이 크지만 △시장예측의 안정 △기업의 신념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를 통하여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

■ [녹색발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를 통하여 '13.5 계획' 목표를 실현

- 2019년 말 이미 13.5 계획의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량 15% 감축 목표의 87.1%를 달성하였지만, '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수 있어 13.5 계획 목표의 실현에 노력을 가중할 필요

표 1.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9년 실적과 2020년 목표

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6~6.5	6.1	미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내외	2.9	3.5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수(만 명)	1,100 이상	1,352	9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하	3.62	5.5 내외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5.5 내외	5.2	6 내외
무역증가율	수출입 안정 속 질적 제고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수출입 안정 속 질적 제고	수출입 안정 속 질적 제고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총통화(M2) 증가율(%)	명목GDP 증가 속도와 맞추어 조절	8.7	'19년 대비 상승
사회용자총액(잔액) 증가율(%)		10.7	'19년 대비 상승
재정적자(조 위안)	2.76 (중앙 1.83, 지방 0.93)	2.76	3.76 (중앙 2.78, 지방 0.98)
재정적자/GDP(%)	2.8	2.8	3.6 이상

자료: 「정부업무보고」;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 중국의 2020년 거시정책 기조는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sup>13)</sup>

13)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정부업무보고'의 공식적인 표현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하고 적절하며 안정적인 통화정책'임. 본 고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같음함.

-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준율 및 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여 운영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안정에 있어 주로 재정정책을 통한 정책 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은 이전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되 양적 완화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지양할 예정

■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정적자율 상향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 △감세 및 비용경감의 4개 방향으로 추진

- 2020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3.6% 이상으로 제시하여 2019년의 2.8%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함(2020년 재정적자 규모액은 3조 7,600억 위안<sup>14)</sup>으로 전년대비 1조 위안 증액).
- 특별국채<sup>15)</sup>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으로 제시했고,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자금 지원과 소비촉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
  - 재정적자 증액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2조 위안의 정책자금은 특별이전지급제도를 신설하여 현(縣)급 지방정부에 직접 이전지급할 예정
- 지방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3조 7,500억 위안까지 확대할 계획
  - 중국정부는 지방채의 조기 발행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sup>16)</sup> △신형인프라<sup>17)</sup> △신형도시화 △국가중점 프로젝트(兩新一重)에 투입할 예정
-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해 맞춤형 감면조치를 확대 시행할 계획
  - 2020년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 비용절감 목표치는 연초에 제시한 목표치(2조 위안)보다 5,000억 위안 증액한 2조 5,000억 위안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중국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양로·실업·상해 보험의 기업 지급액 면제 △소규모 납세인(자영업 등) 부가가치세 감면 △교통운송, 요식, 숙박, 관광, 엔터테인먼트, 문화, 체육 등 서비스업종 부가가치세 면제 △민간항공발전기금·항구건설비 감면 등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고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2021년까지 연장 적용하는 등 맞춤형 감세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
- 2020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규모는 재정적자 확대(3조 7,600억 위안), 특별국채 발행(1조 위안), 지방 특수채 발행(3조 7,500억 위안), 세금·비용 감면(2조 5,000억 위안 이상)을 합산하면 총 11조 100억 위안으로, 2020년 GDP(추산치)<sup>18)</sup>의 약 10.5% 수준
  - 4대 조치 외에도 일반 공공예산 지출, 중앙 예산 내 투자를 각각 전년대비 9,000억 위안, 224억 위안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철도건설 자본금 1,000억 위안을 증액하여 약 5,000억 위안에 해당하는 철도 인프라 투자효과를 유발할 계획

14)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중앙·지방 예산집행 현황과 2020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로, 이 중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2조 7,800억 위안, 지방정부 재정적자 9,800억 위안임.

15) 특별국채는 국가경제 발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시로 발행하는 국채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대응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각각 2,700억 위안, 1조 5,500억 위안 규모로 총 두 차례 발행한 바 있음.

16) 연초 책정한 금년도 지방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2조 1,500억 위안으로, 1/4분기에 이미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조 97억 위안이 발행되었음.

17) 신형인프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5G 기지국, 특고압선, 도시간 고속철·도시 궤도교통, 신에너지차 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AI, 산업인터넷 등 7대 인프라 분야를 의미함.

18) 2020년 GDP는 재정적자율을 3.6%, 재정적자 규모를 3조 7,600억 위안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명목GDP 추산치(104조 4,444억 위안)를 적용함.

표 2. 중국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목표	실적		
재정적자율(%)	2.8%	2.8%	3.6% 이상	·0.8%p 이상 상향 조정
재정적자 규모 (조 위안)	2.76조 위안 (중앙 1.83, 지방 0.93)	2.76조 위안 (중앙 1.83, 지방 0.93)	3.76조 위안 (중앙 2.78, 지방 0.98)	·1조 위안 증액 ·2조 위안(재정적자 증액 1조+특별국채 1조) 모두 현(縣)급 지방정부에 직접 이전지급 → 고용 안정, 민생 보장, 중소·영세 기업 지원에 활용,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임대료 및 대출이자 절감, 소비 및 투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 발행	-	-	1조 위안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한도 상향 조정	2.15조 위안	2.15조 위안	3.75조 위안)	·1.6조 위안 증액 ·지방채의 조기 발행 및 집행 추진(202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조 97억 위안 기발행)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 국가 중점 프로젝트(两新一重) 건설 투자
감세 및 비용경감 등	2조 위안	2.36조 위안	2.5조 위안	·연초 제시한 2020년 목표치(2조 위안)대비 5,000억 위안 증액 ·기업의 보험 부담액 면제, 부가가치세 감면은 연말까지 연장 ·중소·영세 기업과 개인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 2021년까지 일률 연장 ·생산코스트 경감: 전기료 인하(5%) 연말까지 연장, 광대역 전용선 이용료 15% 인하; 국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 및 부동산 업주의 임대료 감면 장려 및 정책지원 ·1~3월 7,000억 위안 감세 및 경비 절감 완료
4대 조치 소계	6.91조 위안	7.27조 위안	11.01조 위안	·4.1조 위안 증액
일반 공공예산 지출	23.53조 위안	23.89조 위안	24.79조 위안	·0.9조 위안(+3.8%)
중앙 예산 내 투자	5,776억 위안	5,776억 위안	6,000억 위안	·224억 위안 증액
국가철도건설 자본금 증액	-	-	1,000억 위안	·철도건설 투자 5,000억 위안 증가(최소 자본금 비율 20% 적용) 예상

자료: 「정부업무보고」;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안화적 통화정책]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19년 미·중 통상분쟁 심화로 인해 시작된 안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강화하고,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역주기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기준을 및 금리 인하, 중앙은행 재대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M2 및 사회용자총액 증가율을 전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힘.<sup>19)</sup>

○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급준비를 인하<sup>20)</sup> △정책금

19) 중국인민은행이 5월 10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겠다(不搞大水漫灌)”는 문구가 삭제되어 향후 중국 통화정책은 2019년에 비해 경기 하방압력에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 중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자산가격 급등, 국유경제 확대와 민영경제 축소(국진민퇴),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 부채 급등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과도한 수준의 유동성 공급은 지양할 것으로 전망됨.

20) 중국인민은행은 4월 3일 금년 들어 세 번째 기준을 인하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기준을 인하조치는 4월 15일, 5월 15일 두 차례에

- 리<sup>21)</sup> 인하 이외에도 △역RP 운영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특별재대출 신설<sup>22)</sup> △국유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만기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 2020년 1~4월 위안화 신규대출액은 8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조 위안 증가하였고, M2와 사회용자총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1%, 12% 증가하여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sup>23)</sup>
  - 통화정책 또한 ‘고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실물경제(특히 중소·영세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통화정책 도구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대출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예정
  - 2020년 4월 말 기준 영세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보다 2%p 상승하였고, 4월 영세기업 대상 신규 포용성 대출의 평균 금리는 5.24%로 작년 12월 대비 0.77%p 하락함.<sup>24)</sup>
  - 향후 △국유상업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증가를 40% 이상 유지 △중소·영세 기업의 원리금 상환 기한 연기 △영세기업 신용대출 확대 △정책 담보대출 확대 및 신청기준 하향 조정 △영세기업 대상 특별채권 발행 확대 △산업가치사슬 내 주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sup>25)</sup>
  -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표 3. 통화정책 목표

구분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M2 사회용자총액	명목GDP 증가 속도와 맞추어 조절	8.7% 10.7%	·2019년보다 명확히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상향 ·제조업 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출 대폭 확대
중소·영세 기업 자금조달 지원	국유상업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증가를 30% 이상	53.1%	·국유상업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증가를 40% 이상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을 2021년 3월 말까지 연기 ·정책 담보대출 확대 및 신청기준 하향 조정 ·영세기업 대상 특별채권 발행 확대
환율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	6.98/USD (2019년 말)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 ·합리적 외환보유고 유지 ·7.12RMB/USD(2020. 5. 25)

자료: 「정부업무보고」참고하여 저자 작성.

걸쳐 각각 0.5%p씩 총 1%p 추가 인하하였고, 중소 농촌은행에 4,0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하였음. 이와 더불어 4월 7일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인민은행에 맡기는 초과준비금 금리도 종전의 0.72%에서 0.35%로 인하함.

21) 중국 정책금리로는 △중양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대출 시 적용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역RP 금리 등이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4월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p 인하하였고, 5년 만기 LPR은 4.75%에서 4.65%로 0.1%p 인하하였음.

22) 특별재대출 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 및 업종(관광, 숙박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농촌 및 영세기업 지원 재대출금리는 0.25%p 인하한 2.5%로 조정).

23) 新浪财经(2020. 5. 27), 「人民银行行长易纲在两会期间就重点问题答记者问」, <http://finance.sina.com.cn/roll/2020-05-27/doc-iircuywi5206381.shtml>(검색일: 2020. 5. 31).

24) 위의 자료

25) 위의 자료

### 3. 9대 중점 업무

-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9년의 10대 임무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압축한 6대 임무를 제시함.
  - 6대 임무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관련된 4개의 단기적 대응(△거시정책 강화와 기업 및 고용 안정 △시장주체 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 △내수 확대와 발전방식 전환 △탈빈곤 및 농업 촉진)과 2개의 중장기 대응(△대외개방 확대 및 무역·외국인투자 안정 △민생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혁)을 포함함.
  - 본고에서는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제시한 6대 임무를 구체화한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요 내용(9대 중점 업무)을 참고하여 정리
  
- [①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방역 성과의 공고화 △해외 코로나19 확산의 대중국 영향 차단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제협력 심화를 과제로 제시
  - [국내 방역 성과의 공고화] 코로나19의 적시 발견·신속 처치·정확한 리스크 관리와 효과적인 응급치료를 통하여 시국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
    - 리스크 방지 시스템의 정보화 및 스마트화, 백신 연구개발을 장려
  - [해외 코로나19 확산의 대중국 영향 차단] 재외 중국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항구도시의 방어선을 수호하며, 변경지역 공공위생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등 해외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
  -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제협력 심화] 세계보건기구(WHO)와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국가 및 지역 간 응급연락 네트워크 및 보건 실크로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방역 협력을 추진
    - 방역물자의 수출 품질을 엄격히 점검하고,特效약물 연구개발 및 방역연구제조 등의 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 [② 3대 난제 해결] '19년에 이어 '20년에도 △빈곤 탈피 △오염 방지 △금융리스크 방지 등 3대 난제 해결을 강조
  - [빈곤 탈피] 고용·소비·산업을 통한 빈곤구제를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성(省)급 지방정부가 총책임을 맡으며 시와 현급 지방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빈곤구제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 ‘취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 확대를 통하여 빈곤층 노동인구의 복지 및 업무종사를 우선 지원하고, 빈곤구제 업무담당자의 조속한 업무재개를 장려
    - ‘소비’를 통한 빈곤구제는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여 전염병 등으로 인한 빈곤지역의 농산물 판매난을 해결
    - ‘산업’의 빈곤구제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지원자금과 빈곤구제 소액신용대출 정책의 적절한 활용을 장려
  - [오염 방지]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호전시키고, 현대 환경관리체계 구축 촉진을 강조
    - 푸른 하늘·맑은 물·깨끗한 토양 수호전(保卫战) 성과 공고화
    - 생태계 보호 감독관리 강화, 글로벌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전국 탄소시장 건설 가속화

- 도시 오폐수 처리, 의료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인프라 보완, 쓰레기 분리수거의 전면적 실시와 택배 포장 및 상품 과포장 오염의 철저한 관리
-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질서 있는 리스크 대처와 채권·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구
  -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및 초국경 자금 흐름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완비
  - 준비기업 청산 가속화 및 고위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를 면밀하게 추적 및 대처
  - 채권 디폴트 처리시스템의 시장화·법치화 구축을 통한 채권시장 안정 유지, 부채출자전환(债转股)의 시장화를 통한 규모·범위 확대 및 질적 발전 촉진, 지방정부 음성채무 감축
  - 토지·부동산 가격 및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장려

■ [③ 내수 확대 ‘내수 확대’는 ’19년 양회의 8대 중점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년 양회에서 세 번째 중점 업무로 포함되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내수 확대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줌.

- ※ ’19년 8대 중점 업무 중 두 번째 업무인 ‘국내시장 강화 발전’의 하위 항목으로 ‘핵심 분야 유효투자 촉진,’ ‘소비의 신성장동력 적극 육성’ 및 ‘시장예측 안정화’가 포함되었으나, ’20년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분리하여 ‘내수 확대’ 업무로 별도로 다룸.
- [소비 잠재력 실현 △온·오프라인 소비의 융합발전 촉진 △新소비·녹색소비·지역특색소비·야간경제 장려 △소비신용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강조
  - 교육·의료·양로·홈케어·문화·여행·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의 온·오프라인 융합발전 촉진
  - 5G 네트워크 건설 및 응용 가속화, 신형인프라 계획 완비, 초고화질 영상 및 가상현실 등 신소비 촉진, 자동차소비 적극 확대, 스마트·맞춤형·녹색 제품의 공급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소비센터 건설
  - 소비신용시스템 구축, 위조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대대적 단속, 소비자권 보호 법률제도와 정책체계 완비
- [유효투자 확대 유효투자 관련 중앙 및 지방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하여 신형인프라 투자 및 전통인프라 개조에 집중 투자
  - 중앙예산 내 투자 관련 예산 6,000억 위안(전년대비 224억 증가)을 안배
  -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에 3조 7,500억 위안(전년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을 배정하여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인프라 설비 및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지원
  - [신형인프라 투자] 공공위생, 생물안전, 응급물자 보장, 물자 및 에너지 비축, 물류설비, 농업·임업·수리(水利), 도농인프라 등 분야의 결점 보완; 5G, 사물인터넷, 차량 IoT,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통합 빅데이터 센터 등 신형인프라 건설투자 추진
  - [전통인프라 개조] 도시의 노후단지 재개발, 판자촌 재개발, 고속철·공항·고속도로 등 건설 프로젝트 장려
  - [금융지원 강화]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PPP) 방식 규범화 혁신,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 시범지역 점진적 추진
- [안정적 사회예측 시스템 구축] 전염병 등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정부부처간 정책 연계 및 조율을 강화하여 사회예측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주체의 신뢰도 제고

■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기초역량 향상과 산업·공급사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

- [기업 지원 확대] 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비용 경감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지원
  - 고(高)에너지소비 산업을 제외한 산업용·상업용 전기료 5% 인하정책을 2020년 연말까지 연장 시행, 광대역 통신 및 전용 인터넷 평균 이용료 15% 인하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지역 내 기업을 비롯하여 도소매, 숙박·요식업, 물류·운송, 문화·오락·관광·무역 등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을 지원
  - 3,000억 위안 규모의 영세기업 금융채권 발행 지원, 회사신용채 순용자 규모 전년대비 1조 위안 증액, 한 해 8,000억 위안 수준의 영세기업 수취채권(应收账款) 담보용자 장려와 같은 금융지원정책을 추진
- [제조업의 질적 발전 촉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지원 확대, 철강기업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구조조정 및 개혁 추진, 친환경제조 프로젝트 시행 등 제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에 초점
- [산업·공급사슬 안정]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을 중점 육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인터넷 혁신 발전 촉진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사슬을 구축함과 동시에 원활한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의 핵심 물자 비축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공급사슬의 안정성 강화
- [신성장동력 육성] 디지털 공급사슬 구축, 디지털 상거래 발전, 디지털경제혁신발전시험구 건설 등 '디지털 경제'의 중점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 국가 빅데이터 전략 및 '인터넷플러스'와 같은 기존의 혁신 정책 지속 추진
  - 스마트제조, 무인택배, 온라인소비, 의료건강, 로봇 등 신항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경제 및 수소에너지 산업과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 '기업 경영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경제 육성(上云用数赋智)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
- [식량안보 및 농산품시장 공급 안정]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농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건설,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주요 농산품 수입 다원화 등을 추진
  - '식량안보 성장(省长) 책임제', '장바구니 농산물 시장책임제(“菜篮子”市长负责制)' 등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 시행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에너지안보 보장]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국내외 에너지시장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수급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

■ [⑤ 혁신주도형 발전 지속 추진]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역량 향상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인재 육성 △창업 인프라 확대 등 혁신 경쟁력 강화

- [핵심기술 중점 육성] 기초연구와 원천혁신 장려, 전 업종의 국산화 응용 촉진,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평가체계 연구,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에 주력
  -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종합하여 코로나19의 전염 원인과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및 백신 연구개발 역량과 긴급 생산능력 확대
- [혁신 인프라 구축 강화] 2006년부터 추진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강요(2006~2020)」에 이어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 제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국가 중점실험실 체계 개편, 과학기술혁신센터·중대 과학기술 기초 인프라, 국가산업혁신센터 건설 등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확대
- [혁신·창업·창조 질적 발전] 새로운 전면적 혁신 개혁실험 시행, 기업간 융합혁신 지원, 창업 인프라 확대, 산학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창출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혁신과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창조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

■ [⑥ 시장화 개혁 지속 추진] 기존의 개혁조치를 더욱 가속화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화·법치화·글로벌화를 추진, 특히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실시

-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管服) 개혁 심화] 「경영환경 개선조례」<sup>26)</sup>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결합 정부서비스' 및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조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또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여건 개선 등에 역점
- [높은 수준의 시장시스템 구축]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분 개혁, 민영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재정비 추진
  -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민영기업의 합법적 재산권 및 경영권 보호, 「반독점법」 등 경쟁정책 관련 법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완비 등을 통해 민영경제(기업)를 중점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
-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혼합소유제 개혁을 적극 추진
- [재정·세무, 금융 및 가격 시스템 개혁 심화] 금융 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중앙과 지방 재정의 직권과 지출 책임 분리개혁 추진, 지방세계계 정비, 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일반 공공예산으로의 편입 비율 제고, 창업 판 개혁, 전기·수도 요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세무, 금융 및 가격 시스템 개혁 심화 추진
  -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기준금리 또는 LPR 연동금리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의 시장화 개혁 촉진<sup>27)</sup>

■ [⑦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주요 지역별 특화발전정책을 시행하고, 거대 도시군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의 녹색발전을 추구

26) 국무원이 2019년 10월 22일 발표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7)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시행일(2019. 8. 20)부터 각 은행의 신규대출은 고시 LPR을 참고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LPR을 기준금리로 채택해야 함.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9. 8. 19),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개편내용 및 시장평가」, p. 2.

- [주요 지역 발전전략 시행] 주요 지역별 특화발전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후베이성의 경제·사회 회복을 위한 경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대개발 추진 △동북지역 진흥 추진 △중부 굴기정책 체계 보완 △동부지역 선도정책 지속 추진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일체화 심화와 승안(雄安)신구 건설 가속 △장강경제벨트 4+1 사업<sup>28)</sup> 추진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에 국제기술혁신센터 및 국가 과학기술센터 건설 △장강삼각주 지역의 생태 녹색발전시범구 건설 및 국제 항만 건설 추진 △황하유역 환경보호 및 질적 발전 계획 수립 등이 있음.
-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하며, 초대형 도시군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 장강 중류(长江中游), 중원(中原), 관중평원(关中平原), 산둥반도(山东半岛) 등 도시군의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건설, 도농 융합 발전시범구 형성방안을 모색
- [농촌진흥전략을 통한 빈곤 퇴치]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SOC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특색 관광업을 발굴하고, 농촌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등 녹색발전을 추진

■ [⑧ 대외개방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중점을 두고 대외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계획임.

- [안정적인 수출입]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다원화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내수시장 전환을 통해 대외수요 위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외자 유치]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축소하고, 중국 내 투자 환경 및 정책 개선을 통한 외자 유입 촉진
  - 서비스업, 금융업, 제조업, 농업 등에 대한 외상투자를 개방하고,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지원정책을 적용하는 등 중국 내 투자 환경 및 정책 개선 추진
- [일대일로 협력 발전]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방지하고, 특히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중·몽·러, 중국-파키스탄, 중국-동남아시아 경제회랑의 지속적인 건설 협력을 추진함.
- [대외개방 가속화]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개방 자율권을 확대하고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중서부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 및 종합보세구 추가 신설을 통해 대외개방을 확대
- [안정적인 해외투자 촉진] 해외투자 정책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진출 중국기업의 현지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위법 여부를 관리
-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 참여] WTO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RCEP 조기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일 FTA 추진을 가속화
  - ※ 국가발개위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외개방 확대 부분에 "미·중 1단계 협상을 이행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중요한 대외경제 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28) 강변 오수 및 쓰레기 처리, 화공업 환경오염 관리, 농업 환경오염 관리, 선박 및 폐기물 환경오염 관리를 칭함.

-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개인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위생 취약점을 보완하며 사회보장의 시스템을 확대
  - [취업 안정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부문 고용, 모병, 대학원생 모집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지역으로의 취업 독려 및 규모 확대
  - [공공위생 취약점 보완] 국가 공공위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염병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의 감염내과, 호흡기질환과를 중심으로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를 수립
  - [사회보장 시스템 수립 가속화]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양로보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
  - [기본생활 보장]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급여 권고안을 마련하여 급여제도를 조사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민공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
  - [공공서비스의 질적 발전] 보편적인 공공 교육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식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

## 4. 평가 및 시사점

- [정부업무보고 키워드] 2020년 중국정부는 2019년에 이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과 다르게 ‘경제성장’ 또는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였음.
  - 2020년 「정부업무보고」의 분량은 2019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고용’(39회), ‘코로나19(疫情)’(31회), ‘민생’(22회), ‘중소기업’(8회) 등은 오히려 언급 횟수가 증가하여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19년과 비교하여 새로 언급된 단어로는 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용어로 ‘6대 보장’(3회), ‘6대 안정’(3회), ‘자영업자’(3회), ‘특별국채’(2회), ‘산업가치사슬 안정’(2회), ‘신형인프라’(1회), ‘식량·에너지 안보’(1회) 등이 있음.

표 4. 2019년과 2020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연도	발전	경제	개혁	성장	혁신	안정	개방	고용	민생	소강 사회	빈곤 탈피	중소 기업	코로나19
2020	85	39	31 (3)	10	12	16	11	39	22	6	16	8	31
2019	142	66	109 (3)	24	46	22	25	30	14	6	16	3	-

주: 키워드는 두 글자 이상 단어로 검색, 개혁 중 ( ) 안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언급 횟수임.  
 자료: 「2019년 정부업무보고」; 「2020년 정부업무보고」 참고하여 작성.<sup>29)</sup>

29) 양회 개최 시 중국정부에서 배포한 정부업무보고와 양회 이후 언론에서 정리한 정부업무보고의 내용 일부에 차이가 있음. 본 키워드는 양회 이후 언론에서 정리한 정부업무보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 [경제운용]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
  -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2020년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과 ‘6대 보장’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6대 보장’ 중 △고용 △민생 △시장주체(기업) 보장을 강조하였음.
  - 중국 총 고용에서 79.4%(18년 말 기준<sup>30)</sup>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코로나19 피해 극복의 출발점으로 강조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 기업 투자 확대 → 고용 창출 → 민생 안정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확대’의 회복 순환고리를 만들어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정부업무보고’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언급하였으나, 대내적 배경으로는 지방정부, 국유은행, 국유기업 등에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제성장률을 설정하게 되면 지방정부, 국유은행, 국유기업 등은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어 경제구조가 취약해지는 부작용(국진민퇴,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국유기업 부채 급등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탈피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빈곤층 및 농민공의 고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경제성장률이 5.52% 이상을 기록해야 ‘GDP 배증 목표<sup>31)</sup>’ 달성이 가능한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하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 ‘GDP 배증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빈곤탈피’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정부가 밝힌 신규 고용, 실업률, 빈곤탈피 목표와 재정적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 내외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재정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

표 5. 주요 목표치 달성을 위한 필요 성장률 추산

2020년 주요 목표	필요 성장률	주요 내용 및 산출 방식
전면적 소강 사회 달성을 위한 2020년 GDP 배증 목표	5.52% 이상	- 정부업무보고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6.8%)을 감안할 때 실현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목표 수정이 불가피 -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 선언은 탈빈곤 또는 기타 목표로 대체할 가능성이 큼.
900만 신규 고용	3% 후반 ~4%	- 2019년의 경우 1% 성장 시 221만 명 신규고용 창출 -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GDP 단위당 신규고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 또는 3% 후반대 성장으로 목표치 달성 가능

30) 중국국가통계국이 2019년 12월 18일 발표한 「제4차 전국 경제 조사 보고서 12」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국 중소·영세 기업 업체 수는 1,087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2,33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총 고용의 79.4%를 차지. 新浪财经(2019. 12. 18), 统计局: 5年来中小微企业吸纳就业人员数量增长5.5%, <http://finance.sina.com.cn/roll/2019-12-18/doc-iihnzhfz6770489.shtml>(검색일: 2020. 5. 30).

31) 중국정부가 2020년 GDP와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고 제시한 목표로, 2020년도 경제성장률 5.52% 이상을 기록해야 소득배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2020년 주요 목표	필요 성장률	주요 내용 및 산출 방식
6% 내외 조사실업률	3.9% 내외	- 2018년과 2019년 조사실업률과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면, 조사실업률 0.22%p 상승(4.93%→5.15%), 실질GDP성장률 0.6%p 하락(6.7%→6.1%) - 조사실업률을 1%p 증가 시 GDP성장률 2.7%p 하락 - 2019년과 2020년 목표치 적용시 조사실업률이 0.85%p 상승하면 GDP성장률 2.2%p 하락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은 3.9% 내외로 추산
551만 명 빈곤탈피	3.3% 이상	- 중국 빈곤인구: 2012년 말 9,899만 명→2019년 말 551만 명으로 축소 - 2019년 1% 경제성장으로 180만 명의 빈곤인구 감소(경제성장률 6.1%, 1,109만 명 탈빈곤) - 551만 명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3.3% 이상 성장 필요
3.6% 이상 재정적자율	2.5 ~3.9%	- 2020년 재정적자율 목표 3.6% 이상, 재정적자 규모 3.76조 위안 적용 시 2020년 명목 GDP는 104.44조 위안으로 2019년(99.09조) 대비 5.4% 증가 - CPI 및 PPI를 고려하여 추산한 GDP deflator 1.5~2.9% 적용 시 실질GDP 성장률은 2.5~3.9% 수준으로 예상

자료: 양평섭(2020. 6. 1), 정부업무보고에 나타난 2020년 중국경제 운용 방향(KIEP 내부자료) 인용.

■ [거시경제정책 기조] 2020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화적 통화정책'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고용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

- 'GDP 배증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농민공 등 취약층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할 계획
- 이번 거시경제정책은 지난 2008년 경기부양책과 비교하여 GDP 대비 비중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 창출 타기팅으로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정책자금의 전달경로를 개선하였으며, 대규모 유동성 공급(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실시될 전망
  - 중소기업 지원에 통한 고용 창출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타기팅이 명확하고, 현금 지방정부로의 직접이전지급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자금의 전달경로를 개선하여 재정 낭비 최소화 및 정책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취약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
  - 이는 2008년 경기부양책 시행 시 4조 위안(GDP 12%)이라는 대규모 정책자금 투입과 기준율 및 금리 인하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GDP 등 총량 지표 회복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대도시 부동산 가격 급증, 국민민퇴 심화, 국유기업 공급과잉 심화, 기업 및 지방 정부 부채 급증, 그림자 금융 확대 등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추가적인 기준율 및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2008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경계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sup>32)</sup>
  - 이 외에 정책자금 출처와 사용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정책자금 배분의 왜곡,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을 방지할 계획

32) 리커창 총리는 양회 이후(2020. 5. 28)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추진하지 않지만, 유동성이 과도해도 문제이고 부족해도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이 적절한 수준에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천명하였음. 또한 2020년 1/4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지양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통화정책의 운영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여지를 남겨 두었음.

-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정교하고 내실화 있게 설계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방재정의 토지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중소·영세 기업 위주 지원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 미미 등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속 관찰 필요

표 6. 중국 2008년 및 2020년 경기부양책 비교

	2008년	2020년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피해 최소화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정책 목표	- 경기둔화 방지 및 경기부양 -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회복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 민생 안정 - 2020년 경제목표와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을 위한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 달성
정책 수단	- 재정지출 확대: 4조 위안(GDP 12%) - 단기간 금리 및 기준율 인하('18. 9~12: 각각 4차례 인하)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 인프라 투자 확대('09 5조 4,695억 위안) - 가전 및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통한 소비 촉진	- 재정지출 확대: 11.01조 위안(GDP 10.5%) <sup>33)</sup> - 금리 및 기준율의 선별적 인하 <sup>34)</sup> -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감세 및 비용 경감, 금리 인하, 대출 상환 연기 등 맞춤형 정책 실시 -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 친환경차, 스마트가전 등 소비 촉진과 동시에 녹색소비, 국제소비센터 육성, 스마트 소비사관 조성,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고도화
전달 경로	- 중앙→국유은행, 금융기관→부동산, 인프라 개발 관련 국유기업,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민영기업 자금난 심화	- 직접전지급제도 신설: 중앙정부→현금 지방정부 또는 중소·영세 기업(중간 단계 왜곡 방지)
(기대) 효과	- 2010년 10.6%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회복 ('07: 14.2%→'08: 9.7%→'09: 9.4%→'10: 10.6%)	- 신규 고용 900만 명 달성 - 551만 빈곤인구 탈빈곤 달성 - 3%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
부작용	- 부동산 가격 급증 - 국진민퇴 심화 - 국유기업 공급과잉 심화 -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급증	-

자료: 저자 정리.

■ [국가전략 중점 분야 조정]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와 중점 분야에 있어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짐.

- 2020년은 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공급측 구조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국가 전환, 일대일로 등이 국가전략의 중점 분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 방역, 3대 난제 해결(특히 빈곤탈피), 고용 및 민생 안정, 내수 확대 등이 강조되었음.
- 중점 업무의 주요 내용과 우선순위가 코로나19 및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일부 수정·보완됨.
- 3대 난제(빈곤, 오염, 금융리스크) 해결 관련, 2019년에는 금융리스크, 빈곤탈피, 오염방지 순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달성을 위해 빈곤탈피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음.

33) 2020년 GDP 추산방식은 본고 각주 15번 참고.

34)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규모별로 차별적인 지급준비율을 적용(대형, 중소형, 농촌)하고 있으며,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포용적(普惠)금융 등의 지원실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준비율 적용 시 우대하는 지급준비율 제도를 운영 중임.

- 공급측 구조개혁은 감세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최우선 중점 업무로 강조하였고, 산업·공급사슬 안정,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 위기상황(전염병 확산, 미·중 통상분쟁 등)을 대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내수확대 중 유효투자 확대 관련 5G,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충전소 등 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형인프라 건설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대외개방 확대와 관련,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에 가장 중시했던 일대일로 협력은 후순위로 조정되었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무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정적인 수출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강조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 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엿볼 수 있음.
- 이번 '정부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인 '6대 안정' 과제는 2018년 7월에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고, '6대 보장' 과제 중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공급가치사슬 안정 보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북부, 중서부 지역 개발을 통한 중산층 육성과 이를 통한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 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표준 제정 등은 미국 시장과 기술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의 견제대상이 될 수 있는 '중국제조 2025' 및 후속전략인 '중국표준 2035'와 같은 국가전략은 제시되지 않음.
- 2020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개혁과제로 '생산요소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토지, 자본, 노동, 기술, 데이터 등 5대 생산요소 시장화(자유로운 이동 및 가격 결정의 시장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데이터를 생산요소에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 육성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코로나19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조업 재개 및 생산활동, 양국간 무역·투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중국 경기부양책은 중소·영세 기업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고용·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발 리스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중국 내 2차 유행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중 간 갈등 심화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중국과 코로나19 방역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미·중 통상갈등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실시 과정에서 미래 신산업과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생산요소 시장화 등 개혁조치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협력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라 중국의 생활 및 소비 패턴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빠른 발전이 예상되는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주의 원칙하에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역내 다자 협력을 통해 단일시장 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중서부 지역 개발과 신형도시화 추진에 따라 내수 주도 성장이 가속화되어 중국의 글로벌 시장 내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중국 소비자 수요에 맞는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의 공급가치사슬 안정화 조치에 따라 중국의 자국 기업 중심 가치사슬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양국간 생산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

부표. 2020년 경제운영 9대 중점 업무

중점업무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방역	국내 방역성과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시국 정상화를 위한 리스크 방지기제 마련</li> <li>- 리스크 방지시스템의 정보화 및 스마트화</li> <li>- 코로나19 의사환자<sup>35)</sup>와 확진자 응급처치 업무 지속 및 회복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심리적 방역 지속</li> <li>- 백신 연구개발 촉진</li> </ul>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 중국인에 대한 관심 확대 지속</li> <li>- 항구도시 방어선 수호, 의료자원 및 치료 역량 강화, 변경지역 공공위생시설 건설 지원, 검역·검측 능력 증강, 위험요소와 원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하여 관리</li> <li>- 격리자 안전서비스 보장, 건강검사 및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人文关怀)</li> </ul>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제협력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보건기구(WHO)와 교류협력 심화, 지역 공공위생 응급연락 네트워크 구축, 유관국가 및 지역에 가능한 지원 지속 제공, 보건 실�크로드 구축</li> <li>- 방역물자 수출품질 엄격히 점검</li> <li>- 과학연구 문제해결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特效약물 연구개발 및 방역연구제도 등 방면에서 성과 도출</li> </ul>
2	3대 난제 해결	빈곤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이 총괄하고 성이 총책임을 맡으며 시와 현(市)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 운용, '삼구삼주(三区三州)<sup>36)</sup> 등 극빈지역 중점 지원 지속</li> <li>- 취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 확대, 빈곤층 노동인구의 복직 및 업무종사 우선 지원, 빈곤구제 업무 담당자의 업무재개 촉진</li> <li>- 소비를 통한 빈곤구제 전개, 생산과 소비의 연계, 전염병 등으로 인한 빈곤지역 농산물 판매난 해결</li> <li>- 산업의 빈곤구제 역량 강화, 산업지원자금과 빈곤구제 소액신용대출 정책의 적절한 활용, 지방재정 특수목적 빈곤구제 자금을 대한 재량권 허용, 산업 빈곤구제 프로젝트 장려</li> <li>- 극빈자 이주정책 촉진, 농촌 수질안전 빈곤구제 마무리 공정 재개, 극빈자 이주프로젝트 완료 후 후속 지원조치 구체화 및 실행, 대형 난민거주지 교육 및 의료 설비 등 분야 단점 보완</li> <li>- 농촌 위험주택 개조 지속, 빈곤층 주거지 안전보장 목표 달성</li> <li>-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곤구제의 실시범위 및 수혜대상 확대</li> <li>-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본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li> <li>- 노동능력이 없는 특수빈곤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저변 강화</li> <li>- 중국공산당 혁명근거지(革命老区) 탈빈곤 문제해결 및 진흥발전 지원</li> <li>- 상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장기적 기제 연구·수립</li> </ul>
		오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호전시키고, 현대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촉진</li> <li>- 철강업계의 탄소배출량 감축, 디젤 화물차의 오염관리 강화, 철도전용선 건설역량 증대, 화물운송 '공전철(公转铁)' 추진 지속</li> <li>- 지급(地级) 이상 도시 공기품질 우량일수 비율 관련 13.5 규획 목표 달성</li> <li>- 전국 중요 생태계 보호 및 복구 프로젝트 건설규획 편제</li> <li>- 생태계 보호 감독관리 강화, 생태보호 경계선 감독관리 표준시스템 수립</li> <li>- 생태보호 보상조례 제정, 생태종합보상시범지역 건설 추진, 국가 생태명칭시험구 건설 심화</li> <li>- 글로벌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전국 탄소시장 건설 가속화</li> <li>- 녹색기술보급목록 발표, 단지 환경오염 제3자 관리 지지</li> <li>- 도시 오폐수 처리와 의료폐기물, 위험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인프라 보완</li> <li>-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적 추진, 택배 포장 및 상품 과포장 오염 관리</li> </ul>
		금융리스크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금융 및 대중상품 시장 변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초국경 자금흐름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완비</li> <li>- 레버리지율이 높고 채산성이 약한 업종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추적</li> <li>- 쯤비기업 청산 가속화, 고위험 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질서 있는 대처</li> <li>- 채권시장 안정 유지, 채권 디폴트 처리시스템 시장화·법치화 촉진</li> <li>- 시장화 부채출자전환(债转股)의 양적·질적 발전(增量扩面提质) 촉진, 전통산업 시장화 구조조정예 금융자산투자회사 참여 유도</li> <li>- 은행의 부실대출 심사정책 실행, 시장주체가 부실대출 처리에 참여하도록 장려</li> <li>- 금융기관 회복 및 처리 메커니즘 완비, 은행의 보충자본 경로 다양화 지원</li> <li>- 지방정부 음성채무 감축</li> <li>- 토지·부동산 가격 및 기대심리 안정</li> </ul>
3	내수 확대	소비잠재력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조치가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각종 상점과 시장 영업 재개 및 오프라인 소비 회복 촉진</li> <li>- 온라인 소비를 늘리고 인터넷과 각종 소비업종의 융합 추진</li> <li>- 교육·의료·양로·가사관리(家政)·문화여행(文旅)·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 온·오프라인 융합발전 촉</li> </ul>

증점업무	주요 내용
	<p>진, 온라인 배달 및 온라인 차량 예약 등 신업종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 사업자 확대를 통하여 농촌에 택배서비스 제공, 공산품의 농촌 유통과 농산품의 도시 유통 원활화</li> <li>- 5G 네트워크 건설 및 응용 가속화, 신형인프라 계획 완비, 초고화질 영상 및 가상현실 등 신소비 촉진</li> <li>- 자동차소비 적극 확대, 배기가스 실측 결과 ‘국가 6단계 표준(国六标准)’을 통과하는 외제자동차 병행수입 허용</li> <li>- 장진지(京津冀) 등 증점 지역에서 국가 3단계 표준 이하 다젤화물차 폐기 시 적절한 보상 제공</li> <li>- 자동차, 녹색스마트가전 등 소비금융 지원 확대</li> <li>- 낡은 가전제품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장려(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고가전 회수시스템 구축)</li> <li>- 스마트·맞춤형·녹색 제품의 공급 확대, 녹색소비 발전 촉진</li> <li>-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소비센터 건설</li> <li>- ‘스마트상권 적극 발전 문화·여행·상업·소비클러스터(文旅商业消费聚集区) 건설 촉진</li> <li>- 향촌여행 및 레저농업 원상복귀 촉진</li> <li>- 야간경제 발전 장려</li> <li>- 범용 항공네트워크 건설 가속화</li> <li>- 국가 물류허브·국가 핵심물드체인물류기지 및 상품유통네트워크 건설, 콜드체인물류·스마트물류·국제물류·공급체인 발전 촉진</li> <li>- 전자상거래와 택배물류 협동발전 촉진</li> <li>- 소비신용시스템 구축, 위조품 저작권 침해 등 문제 대대적 단속, 소비자권 보호 법률제도와 정책 체계 완비</li> </ul>
유효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예산 내 투자 6,000억 위안 안배(전년대비 224억 위안 증가)</li> <li>- 연간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배정금액 3조 7,500억 위안(전년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li> <li>-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인프라설비 및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지원에 집중</li> <li>- 공공위생, 생물안전, 응급물자 보장, 물자 및 에너지 비축, 물류설비, 농업·임업·수리(水利), 도농 인프라 등 분야의 결점 보완; 5G, 사물인터넷, 차량연결망(车联网),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통합 빅데이터 센터 등 신형인프라 건설투자 추진</li> <li>- 도시의 노후단지 재개발, 단지의 수력전로 등 편의시설 증점 재개발</li> <li>- 판자촌 재개발 점진적 추진, 13.5 계획 165개 중대 프로젝트와 국가 중대 지역전략 프로젝트 실시</li> <li>- 프로젝트용 부지 및 에너지 등 요소 제공을 보장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녹색통로(绿色通道) 개설</li> <li>- 금융지원 강화 지속, 정부자금의 유도효과 발휘,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PPP) 방식 규범화 혁신, 민간자본이 결점 보완 및 신형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지</li> <li>-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 시범지역 점진적 추진</li> </ul>
안정적 사회예측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정보 발표시스템 완비</li> <li>- 전염병 방지법에 대한 홍보교육 확대</li> <li>- 정책 안정성·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li> <li>- 정부부처,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정책 연계 및 조율 강화</li> </ul>
4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p>중소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업 지원·구제(纾困)정책 절차 간소화, 기업 행정업무의 온라인화</li> <li>- 기업의 에너지·인터넷·물류·임대 비용 등 감축</li> <li>- 전기·통신 요금 등 인하</li> <li>-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타격이 큰 지역 및 서비스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단계적 감면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상업은행 장려</li> <li>- 창업 담보대출 이자 우대(贴息)정책 개선</li> <li>-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대출연장 비중 제고, 초기대출(首次贷款) 지원 확대</li> <li>- 3,000억 위안 규모의 영세기업 금융채권 발행 지원</li> <li>- 회사신용채 순융자 규모 전년대비 1조 위안 증액</li> <li>- 영세기업 수취채권 담보융자 장려(한 해 8,000억 위안 수준)</li> <li>- 전염병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자본시장이 확대하도록 장려</li> </ul> <p>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지원 확대</li> <li>- 첨단장비 제조,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전자정보 제조 등 제조업 핵심 영역에 대해 증점 지원</li> <li>-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li> <li>- 철강기업의 구조조정 및 개혁을 적극 추진, 석유화학산업의 배치 최적화</li> <li>-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전 및 개조 지속 실시</li> </ul>

중점업무	주요 내용
	<p>산업·공급사슬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제조 프로젝트 시행</li> <li>- 원활한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핵심 물자 비축 확대 지원</li> <li>-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 중점 육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구축</li> <li>- 전문성·정밀성·특수성·혁신성(专精特新)<sup>37)</sup>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li> <li>- 공급사슬의 안보 리스크 평가, 생산력 배치 최적화 및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 확대</li> <li>- 산업인터넷 혁신 발전계획 추진, 산업인터넷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산업인터넷 플랫폼간 표준 연계 강화</li> <li>-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촉진, 서비스형 제조<sup>38)</sup> 발전 강화</li> <li>- 생산형 서비스업<sup>39)</sup> 관련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화</li> </ul>
	<p>신성장동력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 프로젝트 추진 심화</li> <li>-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금융 상품·서비스 제공</li> <li>-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경제 육성(上云用数赋智)<sup>40)</sup>’ 전략 중점 추진</li> <li>-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제의 신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위한 전략 이행</li> <li>- 디지털 경제 혁신발전시험구 건설 추진</li> <li>- 제조, 상업무역, 유통 등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디지털 상거래 발전, 디지털 공급사슬 구축</li> <li>- 국가 빅데이터 전략 및 ‘인터넷+’ 추진 강화</li> <li>- 신형 스마트도시 건설 촉진, 5G 응용 확대</li> <li>- 바이오경제 발전, 생물자원 개발 및 응용 강화</li> <li>- 스마트제조, 무인택배, 온라인소비, 의료·건강, 로봇 등 신흥산업 발전 가속화</li> <li>- 수소에너지 산업 관련 국가급 발전전략 기획 제정</li> <li>- 스마트자동차 혁신 발전전략 추진</li> </ul>
	<p>식량안보 및 농산품시장 공급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li> <li>- ‘식량안보 성장(省长)책임제<sup>41)</sup>’ 및 “장바구니” 농산물 시장책임제(“菜篮子”市长负责制)<sup>42)</sup> 강화</li> <li>- 새로운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강요 및 신시대(新时期) 농업 생산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 제정</li> <li>- 전 세계적인 전염병 발생 확산의 영향하에서 중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li> <li>- 식량안보 보장법 발표 가속화</li> <li>- 농촌의 과학기술 혁신 추진,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li> <li>- 식량의 ‘생산·구매·비축·가공·판매’ 연계시스템 완비</li> <li>-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가축 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통제 지속 강화</li> <li>- 농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시행,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li> <li>- 주요 농산품 수입 다원화 추진,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li> </ul>
	<p>에너지 안보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석유 비축기지 건설 추진</li> <li>- 국내외 에너지 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li> <li>-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운영체계 완비</li> <li>-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확대</li> <li>- 전력 거래기구의 독립적인 운영 추진, 전국 통일의 전력시장 구축</li> </ul>
5	<p>혁신 주도형 발전 지속 추진</p> <p>핵심 기술 중점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중점 프로젝트 관련 업무 연계 추진,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li> <li>- 전 업종의 국산화 응용을 위한 기초 플랫폼 구축 지원</li> <li>- 기초연구와 원천혁신 장려·지원 시스템 완비</li> <li>-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평가체계 연구</li> <li>- 혁신적인 제품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조달정책 완비</li> <li>- 코로나19의 전염원과 바이러스 전파 유발 등에 관한 연구 강화</li> <li>- 의약품, 백신 연구개발 역량과 긴급 생산능력 확대</li> <li>- 국가 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 정비 가속화</li> </ul>
	<p>핵심 인프라 구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및 국가 중대 과학기술 기초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li> <li>- 기초연구 및 원천혁신, 파괴적 기술혁신 강화</li> <li>- 국가실험실 건설 가속화, 국가 중점실험실 체계 개편</li> <li>- 학제간·대규모 협업·고강도의 혁신 협력을 위한 기초 플랫폼 구축</li> <li>- 과학기술혁신센터, 종합적 국가과학센터, 중대 과학기술 기초인프라, 과학교육 기초인프라 및 국가산업혁신센터, 기술혁신센터, 제조업 혁신센터, 공급사슬 과학기술혁신 센터 등 구축·건설</li> <li>- 중대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 제정</li> <li>- 혁신인재(특히 기초연구 분야) 육성 지원 체계 및 정책 완비</li> <li>-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및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혁신 발전수준 제고</li> </ul>
	<p>혁신·창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전면적 혁신 개혁실험 실시</li> </ul>

중점업무		주요 내용	
6	시장화 개혁 지속 추진	창조 질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 기업과 각 분야 주체 간 융합 혁신 지원</li> <li>- 대중창업·만중혁신 시범기지를 새롭게 건설</li> <li>- 산학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li> <li>- 창업 투자 분야의 시스템 개혁 추진</li> <li>- 인큐베이터,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sup>43)</sup> 등 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역량 확대</li> <li>- 창업 담보대출 대상 범위 확대</li> </ul>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환경 개선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 전면 시행</li> <li>- 경영환경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 방법 마련</li> <li>- 기업의 '온라인 원스톱 정부서비스' 플랫폼 개설 관련 심사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온라인을 통한 전 과정의 업무 처리 실현</li> <li>- 영세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주소지 등기 제한 완화, 창업자에 대한 등록 경영 편리화 등 추진</li> <li>-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조치 개혁 추진 심화</li> <li>- 투자심사 비준제도 개혁 이행 심화</li> <li>- 정부조달법, 입찰법 수정 작업 추진 가속화</li> <li>- '온라인 결합 정부서비스(互联网+政务服务)' 추진 심화, 정부서비스 효율 향상</li> <li>- 신용약정제도 추진, 사회신용체계의 법치화 수준 제고</li> </ul>
		높은 수준의 시장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요소 시장화 배분체제의 완비, 생산요소 시장화 배분 종합개혁 시범지역 추진</li> <li>-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완화</li> <li>- 민영기업,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진입장벽 중점 해소</li> <li>- 경쟁정책에 관한 지도의견 연구·제정, 공평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 수정</li> <li>- 재산권 평등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강화</li> <li>-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치환경 정비, 민영기업·민영기업가의 합법적 재산권 및 경영권 보호</li> <li>- 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 관련 법 집행 강화 및 개선</li> <li>-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li> <li>-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 특히 전환 및 응용 확대</li> </ul>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방안 제정</li> <li>- 국유경제의 전략적 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정 추진 가속화</li> <li>- 혼합소유제 개혁 적극 추진</li> <li>-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 제정</li> </ul>
7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재정·세무, 금융 및 가격 시스템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과 지방 재정의 집행권과 지출 책임 분리개혁 추진</li> <li>- 지방세 체계 정비, 소비세 징수 권한을 지방으로 점차 이양</li> <li>- 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일반 공공예산으로의 편입비율 제고</li> <li>- 금융 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li> <li>- 기존 변동금리 대출(存量浮动利率贷款)을 기준금리(定价基准)로 전환 추진</li> <li>- 창업판(创业板, 중국판 나스닥) 개혁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총체 실시망안 발표</li> <li>- 직접융자(특히 지분융자(股权融资)) 비율 지속 제고</li> <li>- 공공사업(公用事业) 가격개혁 심화, 전기·수도 요금 개혁 지속 추진</li> </ul>
		주요 지역 발전전략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지역의 발전전략 추진, 후베이성 경제·사회 지원 정책 패키지 추진</li> <li>- 해양경제 발전 및 해양강국 발전 가속화</li> <li>- 〈전국국토공간규획강요(2021~2035)〉 수립</li> </ul>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공에 대한 맞춤형 정책 보완, 비호적인구(非户籍人口) 1억 명의 도시 정착 추진</li> <li>- 거대 도시의 특징점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 확보</li> <li>- 도시 기능 최적화 및 공공서비스 질적 제고: 스마트시티 건설 및 도시 빅데이터 수집</li> <li>- 도농 융합발전시범구 형성방안 모색</li> </ul>
8	대의 개방 확대	농촌진흥전략을 통한 빈곤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산업 융합 발전, 농산물 가공지역 건설, 농업현대화: 농촌산업융합발전 시범구 건설, 중국 특색의 농산물 경쟁력 강화</li> <li>- 관광 특화 농촌지역 육성: 소수민족 지역 특색 관광업</li> <li>- 농촌지역 사회 간접인프라 수준 향상: 농촌주거환경개선3년계획 완수</li> <li>- 농업녹색발전: 농촌 하수처리 종합시범지역 실시, 농업폐기물 에너지자원화 사업 추진</li> </ul>
		안정적인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시장 다원화 정책 확대: 온라인을 활용한 기업 협력 및 진출 지원</li> <li>- 수출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독려</li> <li>-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보세구 질적 발전, 서비스무역 시범지역 추진</li> <li>- 단기수출신용보험 인하 및 중장기 정책성수출 전문보험 출범</li> </ul>

증점업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추진</li> <li>- 외상투자법 및 관련 법규 실시,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대폭 축소, 외상투자 장려목록 확대</li> <li>- 서비스업개방 시범지역 확대</li> <li>- 외자기업 지원 강화: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지원 및 구제 정책 시행</li> <li>- 해외 대출 및 중장기 외채 발행 및 외채 리스크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리스크 방지</li> <li>- 지역협력 강화: 중·몽·러, 중국-파키스탄, 중국-동남아시아 경제회랑 인착</li> <li>- 중국-유럽 간 철도 협력 추진 및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개방 자율권 확대</li> <li>- 하이난 자유무역항건설방안 발표 및 실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출범</li> <li>- 중서부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 및 종합보세구 추가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주도의 해외투자 지원</li> <li>- 글로벌 생산능력 협력(国际产能合作) 및 시장다원화를 통한 중국의 설비, 기술, 서비스, 브랜드, 표준 국제화</li> <li>- 해외투자 정책 및 서비스(설계, 자문, 회계, 인증, 법률 등)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화</li> <li>- 제3국 공동진출 적극 추진</li> <li>- 중국기업의 해외 법·제도 준수 권고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해외 운영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무역체계 견지 및 WTO 개혁 적극 참여</li> <li>-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li> <li>- RCEP 조기협상 타결 추진, 한·중·일 FTA 추진 가속화</li> </ul>
	9 국민 기본 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생서비스 시스템 구축</li> <li>- 공공위생법제 보장 강화</li> <li>- 중대 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 공공위생 위기관리 시스템 및 국가 중대 전염병 대응 정책 마련</li> <li>- 성별 바이오안전 3급 이상 실험실 설립</li> <li>- 전염병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의 감염내과, 호흡기질환과를 중심으로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의료보험·의약 개혁 심화: 의료보장기금 관리체계 개선,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 조정체계 구축, 의약품 공급 원활화, 의약품 정부조달 추진</li> <li>- [의료보험] 의료보험기금 효율 향상, 의료보험 재정보조금 인당 30위안 인상</li> <li>- [실업보험] 성급 관리체계 구축, 가입 1년 미만의 농민공 보장</li> <li>- [산재보험] 성급 관리체계 구축</li> <li>- [양로보험] 전국 관리체계 구축 가속화, 기초양로보험 지급 최저 기준 인상, 3개 축 중심 양로보험 제도 수립<sup>45)</sup></li> <li>- 국유자본의 일부 사회보장기금 전환</li> <li>-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가속화</li> <li>- 기초생활보장 범위 확대: 생계곤란 가구, 도시 실업자 및 귀향 농민공 포함</li> <li>- 공무 수행 중 순직에 대한 예우 확대</li> <li>- 여성, 아동, 노년층,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li> <li>-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추진: 도시 빈곤층에 대한 보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 재산 및 소득 안정 성장: 개인 대상 국제 지방채 발행 액수 확대</li> <li>- 소득분배 개혁: 기업 급여 권고안 및 급여제도 조사제도 완비</li> <li>- 농민공 노동 안정적 수익 보장</li> <li>-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li> <li>- 사회복지제도, 복지급여 기준과 물가 연동 메커니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출범 및 시범 운영</li> <li>- 의무교육비 보장체계 마련</li> <li>- 농촌 지역 기숙학교 및 소규모 학교 건설</li> </ul>	

증점업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기 이전 교육 자원 다원화, 고등교육 보편화</li> <li>- 대학 이상 교육의 발전,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 발전</li> <li>- 산업 및 교육 연계 시범지역 추진</li> <li>- 고령화 대비: 노인 복지서비스 발전</li> <li>- 문화관광 질적 개선: 황하문화 보호 및 전승, 문화시설 건설 가속화, 농촌관광 및 레드관광<sup>46)</sup> 발전, 하이난 국제관광센터 추진, '인터넷+관광' 발전</li> <li>- 동계올림픽장 건설 추진</li> <li>- 생활 밀접 서비스업 발전</li> <li>- 전략물자 비축 안전관리 시스템 개혁</li> <li>-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li> <li>- 사회질서 관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기능 개선</li> <li>- 식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안전책임제, 조사 실시, 안전사고 예방</li> <li>- [홍콩] 국제금융무역센터 건설, CEPA 시행</li> <li>- [마카오] 글로벌 관광레저센터 건설, 포르투갈어권과 무역협력 서비스플랫폼 설립 추진</li> <li>- [대만] 대만인민과 대만기업에 동등한 지위 제공</li> </ul>

자료: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재정리.

- 35)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대한민국 검역법 제2조).
- 36) 삼구삼주(三区三州)에서 '삼구'는 티베트(西藏), 신장(新疆) 남쪽 변방 4개 주(州) 및 4개 성(省) 장족지역(藏区)을 의미하고, '삼주'는 간쑤(甘肃)의 린샤주(临夏州), 쓰촨(四川)의 량산주(凉山州) 및 윈난(云南)의 누장주(怒江州)를 지칭함.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빈곤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됨.
- 37) '专精特新'은 생산제조기술 및 제품(용도)의 전문화, '精'은 제품, 기술 경영관리 측면의 정밀화, '特'은 제품 및 서비스의 특화, '新'은 제품기술의 혁신을 각각 의미함.
- 38) '서비스형 제조(服务型制造)'란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 형태, 즉 새로운 제조 모델을 의미함.
- 39) '생산형 서비스(生产性服务业)'란 산업생산, 산업기술 진보, 산업 업그레이드 및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함.
- 40) '上云'은 기업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축적, '用数'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응용, '赋智'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스마트화를 각각 의미함.
- 41) '식량안보 성장책임제(粮食安全省长负责制)'란 국무원이 각 성급(省级) 인민정부로 하여금 식량 생산·비축·유통 등의 단계를 관리하고 지역 내 식량안보 보장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임.
- 42) "장바구니" 농산물 시장책임제("菜篮子"市长负责制)란 각 시(市)의 시장이 도시민들에 대한 장바구니 농산물(생활 필수 농식품: 주로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임. 주로 비축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수급 균형 및 가격 안정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중국농업동향」, p. 7.
- 43)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이란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교류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 혹은 서비스화하고, 자금 조달과 인큐베이팅 등을 하기 위해 형성된 공간을 의미함.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p. 39.
- 44) 삼지일부(三支一扶) 정책으로 농촌 지역의 농업, 교육,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뜻함.
- 45) 3개의 축(第三支柱)은 국가 양로보험, 기업 기업연금, 개인 저축성 양로보험을 뜻함.
- 46) 중국 공산당 연혁 관련 박물관, 기념비, 장소 등 방문.